



계열화사업의 재정립

양계산업에 있어 계열화(integration)사업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라 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양축농가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은 10여년이 지난 '80년대 중반이라 할 수 있다.

경제통합원리에 입각하여 일괄생산체제, 즉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종 상품을 놓고 중간단계에 투입되는 요소를 중간자재로 간주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상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 선진 양계산업국이 시행해온 경영방식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수입개방이 논의 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나 이행기간이 짧고, 사회구조 변화상 신용사회의 정착이 되지 못한 탓으로 함축성 있게 대처를 하지 못해 계열화사업이 큰 진전을 보지 못

하였던게 사실이다.

'88년 이후 양념통닭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계육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육계산업은 다소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중간유통업자, 사료대리점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생산에만 관여하는 반쪽짜리 계열화사업에 대거 참여하게 되자 이를 유사계열화사업이라 분류하여 왔다.

이로인해 생산이 과잉되고 신상품이 뒤따르지 못하여 소비증가율이 둔화되자 계열화사업의 최종 핵심부문인 유통망이 없는 업체들은 생산해낸 닭을 처분하지 못하는 형편에 서자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도산을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92년초부터 유사계열업체의 부도는 계속되어 비공식 집계로 20여 업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형상 한 업체가 평균 30억원대의 부도가 발생했다면 총 600~7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유사계열업체의 특징은 전업양계인이 아닌 농민 가운데 농외소득을 생각하는 자들

을 주로 계약사육자로 선정하여 연대보증이나 재정보증(담보)을 요구하여 부도가 터지면 닭은 사료업체나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빼앗기고 업체가 적자를 낸 부채까지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엄연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받고 경쟁력(업체간, 국제간)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계열화사업의 목표임에 비추어 볼때 양자의 피해는 물론 기존계열업체의 경쟁력을 위축(생산과잉) 시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계열화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다시 세워져야 건전한 업체만이라도 살아남아 양계산업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기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대두와 배합사료

양계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논하기 앞서 경쟁력이 무엇인가부터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양계산업에서 경쟁력을 논할 때 우선 가격적인 측면과 품질로 양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상 부각을 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즉 냉동과 냉장육을 엄격히 구분, 맛으로 선택을 할 만큼 양계산물 소비에 있어 분위기 조성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면 가격경쟁을 통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본회가 '92년 4월에 계육 및 계란의 생산

비를 분석한 결과 수치상으로 일단 열세에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다. 계육이 54.48%, 계란 62.48%(육성비제외)로 분석되었다.

이번 7월1일자로 적용된 국내산 대두의 배정을 놓고 일부 배합사료업체에서는 가격인상론까지 운운하고 있어 장기간 불황의 길을 걸어온 양계업자들의 마음은 찻찻하고 무거울 뿐 이다.

정부는 '92년도에 국산대두 45만톤을 사료업체에 배정하여 톤당 201원에 구매토록 하여 양축가들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 후반기 물량인 22만5천톤에 대해 7월1일자로 약 5% 인상된 211원에 구매토록 하였다. 국내 대두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그리 나쁠 것이 없으나 수입개방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대두박을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전적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생산비만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가세 영세율적용, 무관세 등등 양축가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행되어도 실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사료비 외의 또다른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입장임에 있으나 여기 저기서 비율이 낮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산대두 처럼 사료를 쓰는 양축가에게 떠넘기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양특자금이나, 국민기금등으로 보전하여 국내 대두농가와 축산농민이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도록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